

# 체제전환운동

## 세력화와

## 총선 대응 방안

## 모색 토론회

#지금정치영망

#체제전환운동

#세력화미래

#2024총선어떻게

#공동의전망

#함께하면어때

2023년 9월 1일(금) 오후 2~5시, 노들장애인야학 4층 대교육장 + 온라인중계

### 발제

정록 |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

2024년 총선,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

### 토론

지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필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장

지수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이승철 |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

남영란 | 부산지역 활동가

### 공동주최 |

기후정의동맹 길내는모임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2024년 총선,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

정록 |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

## 0. 들어가며

내년 4월, 22대 총선이 진행된다. 이미 정치권은 총선을 바라보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아마도 한국 정치 역사상 가장 시민들의 관심에서 떨어진 ‘정치 혐오와 냉소’의 선거가 될 것이다. 이는 지난 대선이 탄핵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등장한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심판이 되면서 예정되어 있던 바이다. 다른 세상을 꿈꾸며, 대통령을 끌어내렸지만 세상은 그대로였다. 아니 오히려 보건위기, 돌봄위기, 주거위기, 경제위기, 기후위기, 재난참사와 같은 중첩된 여러 위기들을 한꺼번에 경험하면서 삶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정치’는 이러한 삶의 위기를 다루기는커녕, 위기가 만들어낸 대중들의 불안과 적대를 더욱 부추기며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한편, 사회운동은 이러한 ‘정치 혐오와 냉소’를 꽤 일찍부터 경험하고 드러내왔다고도 할 수 있다. 사회운동의 여러 부문과 의제들이 제기하는 ‘이슈’에 대한 법제도적 개입을 위해 주로 민주당 계열의 정치세력과 정책협약/선거협력 등을 반복하지만 언제나 ‘현실 정치’ 문법 속에서 배제되거나 왜곡되어 온 경험이 한 축이라면, 보수양당체제를 넘어서는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기치 아래 전개된 진보정당운동이 ‘정치 혐오와 냉소’를 넘어설 희망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 다른 한 축이다.

하지만 각자도생의 시대, 삶의 위기와 불안을 넘어 다른 세계를 향한 집단적 관계와 힘을 조직하는 과정이 ‘정치’라면, 사회운동은 그 역할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냉소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대중들의 삶과 유리된 채, 공적 권력의 점유를 향한 정치집단 간의 다툼이 된 현재의 ‘정치위기’에 사회운동의 책임은 없는가? 아니, 어쩌면 현재 사회운동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마주한 위기와 모순이 서로 맞물려있음에도, 부문과 의제에 갇혀 체제를 넘어설 공동의 전망을 세워내지 못한, 대안사회를 향한 ‘정치적 주체’로 스스로를 조직하지 못한 데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변화는 각각의 사회운동에게 함께 체제전환운동으로 변화, 재구성될 것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 1. 사회운동에게 ‘정치’는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작동해왔는가?

사회운동은 노동, 인권, 장애, 반빈곤, 여성, 성소수자, 기후정의, 환경 등 다양한 부문과 의제들 속에서 각각의 운동이 지향하는 가치를 사회 보편적 가치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사

회운동의 활동양식은 흔히 '가치와 윤리'의 문제와 결부되어 이해된다. 하지만 사회운동은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집단적 관계와 힘을 조직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활동이 언제나 '정치적'임을 자임해왔다. 이러한 사회운동의 '정치'는 '광의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운동에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정치'의 영역 또한 명확하다. 사회운동은 일상사업과 대중투쟁을 통해 형성해온 '사회적 힘'을 제도정치로 밀어넣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벌인다. 각 부문, 의제와 관련된 법제도 관련 투쟁들, 각종 거버넌스 기구 참여, 선거시기 정책대응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정치적 주체'로 조직되지 못한채 의제와 부문으로 나뉜 사회운동의 '정치'는 결국엔 다른 '정치세력'에게 의탁하거나 소비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사회운동의 수많은 요구들이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배제되고 왜곡되는 것은 기본이고, 사회운동의 힘으로 필요한 거버넌스가 조직되기보다 보수정당의 필요에 따라 사회운동의 역량이 선발되고 소진된다. 사회운동은 대중운동으로 더 넓고 깊어지기보다, 의제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고 이에 적합한 인물들은 거버넌스 참여에 이어 정당 정치인으로 입신해왔다. 그 동안 민주당 계열 정당에 입당한 수많은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의 행보가 이를 보여준다. 이들은 노동, 여성, 환경, 장애, 청년 당사자 또는 정책 전문가로서 운동의 과제를 실현하려고 노력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민주당의 지향과 한계에 갇힐 뿐이었다.

다른 한편, 한국 사회운동이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며 만들어온 역사가 있다. 지금의 진보정당들은 그 역사의 결과물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사회운동이 펼쳐온 '정치'와는 달리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목표로 한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이 의미하는 바는 '보수양당구조 타파', '진보정당 대통합', '소수정당 선거법 개혁'외에는 떠오르는 게 별로 없는 제도 정치 세력이다. 사회운동과 친화성을 갖는 '선거정치', '제도정치의 행위자'라는 기능과 역할의 차이가 두드러질 뿐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운동에게 '정치'는 자신과 분리된 냉소의 대상이거나, 정책 중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내세우며 거리두기를 해야 할 영역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운동이나 진보정당운동 공히 '정치적 전망과 대안'으로 스스로를 조직하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운동의 '정치'는 '개별 의제/사안을 중심으로 한 압력행사'에, 진보정당들의 '정치'는 '보수양당구조 타파'와 '진보정당 대통합'에 머물렀다. 이는 정치 이념과 노선에 입각한 '정치적 주체화'가 아닌 '집단별 조직화'에 가깝다.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는 대중들의 삶과는 유리된 채 자신들의 이해와 권력에만 몰두하는 보수정치가 만들어낸 '정치위기'의 결과물이다. 동시에 이러한 '정치위기'를 넘어설 '정치적 전망과 대안'으로 등장 하지 못한 사회운동이 일조한 결과이기도 하다.

## 2. 사회운동, 체제전환을 향한 정치적 전망과 대안을 만들자

사회운동은 다양한 의제와 부문에서 자기 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밝히며 분투하고 있다. 비록 각각의 의제와 부문으로 나뉘어 있지만, 서로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흐름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연대는 운동들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만들어내고, 비판적 사회운동 세력으로서 동질감을 형성해왔다. 또한 각각 고립된 특수한 개별 사안이 아닌,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금 이곳의 정치-사회공동체의 문제, 체제의 문제라는 것을 활동 속에서 경험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이 각자의 의제와 부문을 넘어서는 정치적 전망과 대안으로 조직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실천을 필요로 한다. 채용성차별, 성별임금격차 해소 활동이 비정규직의 여성화, 빈곤의 여성화에 맞선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돌봄노동과 같은 재생산 노동을 가족형태에 결부된 성별 분업체계를 통해 조달하는 체제의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추동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운동이 개별 사업장 노동자들의 차별해소를 넘어, 보편적 노동권 보장과 자본의 책임문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주화를 통한 노동의 위계와 격차를 생산해온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정치'의 문제로 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별, 인종, 학력, 장애, 나이에 따른 노동 취약계층은 계속 생산될 것이며, 사회운동은 지원체계의 수행자를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한국 사회에 뒤늦게 등장한 '기후정의운동'은 국제기후체제가 30년 동안 수행한 신자유주의적 녹색전환의 완벽한 실패라는 역사 위에서 '체제전환'을 외치며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현재 사회운동이 겪는 곤경은 정권의 변화에 기인하지 않는다. 이미 정치가 대중들의 삶의 문제를 다룰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게 드러난 상황이다. 사회가 여러 집단들로 쪼개져 제로섬 게임/각자도생의 삶으로 몰리고 있고 정치는 이를 더욱 부채질하면서 체제의 문제를 각자 감당할 책임의 문제로 둔갑시키고 있다. 우리는 돌봄, 보건, 주거, 노동, 기후, 재난과 같은 중첩된 삶의 위기 속에서 그 어느때보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사회운동이 활동해온 각 부문과 의제 대응 역시 근본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대응해야 할 사안들은 쏟아지지만, 이런 대응은 임시방편조차 되기 어렵다는 감각이 공유된다. 서로 복잡하게 맞물린 문제들에 대응하는 거대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감각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운동이 변화시켜야 할 대상을 명확히 '체제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전망과 대안으로 스스로 새롭게 조직되어야 한다. '체제전환'이 단지 이 시대에 대한 비평이나 담론분석이 아닌 '운동'의 공동 전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논의의 출발점은 다음과 같다.

## 1) 제도화된 사회질서로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비판

수백 년 뒤의 역사를 상상할 수 있다면, 미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명명할 것이다. 흔히 자본주의는 '경제' 시스템을 지칭하는 말로 생각되지만, 바로 그 경제 시스템이 다양한 사회적 질서와 영역들을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조직하고 배치해 가치증식의 계기로 삼는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는 '경제'를 넘어 현대사회를 연결하고 통합/배제시키는 강력한 사회적 힘으로 작동한다. 그런 점에서 '체제의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가 야기한 모순과 위기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 탐욕스러운 체제는 오로지 이윤을 위해 작동하며 이를 통한 자본축적과 성장만이 지상명령이다. 생산이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는 재생산을 위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삶의 영위와 유지는 오직 노동력 상품의 재생산 과정일 따름이며 자본주의적 생산에 철저히 종속된다. 자본은 노동력 상품과 원자재를 값싸게 조달하기 위해 사회의 돌봄-재생산 역량과 자연을 수탈하고 파괴한다.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사적 소유권, 시장 질서, 화폐발행, 치안을 책임져왔지만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역할도 어느 정도 담당해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이후, 정치는 이 역할을 포기하고 '정치의 영역과 의제'를 지극히 제한했다. 오히려 공적 영역

이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정치, 사회, 경제, 생태 각 영역이 현재 ‘체제의 문제’로 어떤 상황에 봉착해 있는지 어떤 구조를 겨냥해 변화시켜야 할지, 자본주의/신자유주의 비판으로부터 시작하자.

## 2) 사회운동의 이념들로부터 ‘체제전환운동’의 구성

우리는 ‘사회운동’의 역사 위에서 운동을 펼쳐나간다. 이 세계의 분할선이 성별/성적지향, 인종/민족, 인간/비인간 자연에 따라 구획되고, 지배와 억압의 권력이 이러한 분할선을 따라 제도화되며 이에 저항해온 운동들이 면면히 이어져왔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페미니즘, 반제국주의/반인종주의, 생태주의는 이러한 운동에 붙은 이름들이다. 하지만 지배권력이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으며, 우리는 이를 역사화해야 한다. 바로 지금 이는 인종화, 젠더화된 방식으로, 자연을 생산요소화해 작동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와 권력의 형태로 등장한다. 즉 성별, 인종, 자연으로부터 독립적인 ‘자본/경제’는 허구이며, 젠더권력, 인종주의, 개발주의는 자본 권력으로, 산업화-제도화된 형태로 작동한다. 특히 사회운동이 각 부문과 의제로 나뉘어 활동하는 조건에서 공동의 전망을 구성해야 하는 지금, 페미니즘, 반인종주의, 생태주의 이념들로부터 체제를 비판하고 분석하는 것은 단지 상호연관성이나 여러 관점의 나열이 되어서는 안된다. 불평등과 부정의의 구조 속에서 투쟁의 연결지점과 공동의 전망을 열어가는 ‘체제전환운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3) 다른 세계를 향한 공동의 전망과 서사 구축

앞선 논의의 출발점들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위기의 원인을 밝히고, 무엇을 변화시키고 넘어서야 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체제전환운동’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려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함께 만들고자 하는 정치사회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어쩌면 각각의 사회운동들은 민주당 정권에 대한 비판에 있어 가장 선명한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개별 의제들 수준에서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선명한 비판과 더 급진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요구했던 것은 언제나 사회운동의 몫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대중들에게 다른 전망을 제시할 수 없었다. 바로 ‘정치적 주체’, ‘정치적 전망과 대안’으로 스스로를 조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9일 길내는모임 토론회에서 제시되었던 ‘존엄과 평등을 향한 정의로운 전환’, ‘탄소사회, 과로사회, 시설사회로부터의 전환’과 같은 제안들이 바로 이러한 시도들일 것이다.

## 3. 2024년 총선,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

### 1) ‘탄중위 해체 공대위’, 돌이켜보니 ‘등장’이 중요했다

기후정의동맹의 전신은 2021년 9월에 출범했던 ‘탄중위 해체 공대위’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에 ‘2050 탄소중립위원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제정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기후위기 대응방안으로 신자유주의 녹색성장 전략을 선언했다. 그럼에도 기후운동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보다는 온실가스를 더 빨리 감축할 것을 요구하며 감축목표치 ‘숫자’에 집중했고, 탄소중립위원으로 참여해 감축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탄중위 해체 공대위’는 바로 이 지점에 개입해 ‘전선’을 만들고자 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고 하면, 50% 감축을 요구하는 기후운동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야기한 자본주의 성장체제가 제시한 해법은 답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기후정의운동의 구체적 요구와 투쟁으로 다른 세계를 열어갈 것을 밝힌 것이다. 공대위는 이러한 녹색자본 육성책이 ‘위원회’ 형식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를 배제하고 기술관료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비판을 했다.

혹자는 이를 기후운동의 분화, 분열로 평가하지만, 오히려 기후운동의 재구성과 확장, 기후정의운동의 형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공대위의 선명한 비판과 전선긋기는 ‘갈라치기’가 아닌 기후정의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분명히하고 새롭게 운동을 조직하는 출발이었다. 당시만 해도 기후위기는 여전히 ‘환경단체’들의 이슈로 이해되었고, 운동의 언어는 지구과학의 언어였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사회운동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이런 흐름을 연결하고 조직할 운동의 자리가 아직 열리지 않았던 것이다. ‘탄중위 해체 공대위’는 바로 그 장소를 열어냈다. 공대위에 농민운동, 장애운동, 청소년/청년운동, 반빈곤운동, 재생산정의운동, 인권운동, 불안정노동철폐운동, 발전 노동자들이 함께 모였다.

사실 ‘탄중위 해체 공대위’는 오랜 논의와 준비 끝에 제안된 조직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기후위기 대응전략과 이에 호응하는 일부 기후운동에 분기탱천한 이들이 한 차례 준비모임을 진행하고, 공대위를 제안했다. 그럼에도 적절한 시기에 공대위가 ‘체제전환’과 ‘기후정의’를 내걸고 ‘등장’했기에 기후정의운동의 전망과 과제가 제기될 수 있었고, 이를 함께 할 운동 주체가 모일 수 있었다. 정말 필요한 ‘운동’이라면 ‘등장’자체가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 2) 2024년 총선,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등장 무대

이번 2024년 총선은 사회운동이 ‘체제전환운동’으로 정치세력화하며 등장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정치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 정치 역사상 가장 관심을 받지 못하는 ‘정치 혐오와 냉소’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은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문재인에 대한 심판선거였다. 탄핵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끌어내리고 등장했던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좌절과 심판이었다. 윤석열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이들은 다시 윤석열 정권 심판 ‘투표’를 요구받고 있다.

광범위한 정치냉소의 핵심은 중첩된 삶의 위기들을 ‘정치’가 다룰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된다는 점이다. 대중들은 다양한 삶의 불안과 위기를 홀로 겪지 않기 위해, ‘국가와 사회’를 호출해왔다. 선거시기를 중심으로 ‘정치세력’들은 이에 경쟁적으로 응답하는 듯 하다가도, 결국엔 자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조용히 드러낸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의 관심사이자 관할권을 강력히 드러냈던 것은 검찰/경찰/군대와 같은 국가공권력의 장악과 확대, 국가재정을 통한 ‘현금지원금’ 정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돌봄위기는 사회적 돌봄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청했고, 부동산 시장폭등은 과도한 가계대출과

전세사기라는 주거위기로 드러났고, 매년 심화되는 기후재난은 참사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는 여기에 응답하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자체를 ‘정치’의 의제로 올려놓지 않은 결과는 격렬한 집단간 갈등과 ‘능력주의와 공정’ 이데올로기의 확산이었다. 지난 겨울 에너지 위기로 가스요금 이 폭등했을 때, 지배세력은 필수재의 안정적 공급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해소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듯이, 에너지 가격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고 시장가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은 ‘정치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대중들은 정치 영역을 확장할 것을 요청하지만, 신자유주의는 끊임없이 정치의 역량과 영역을 축소시켜왔다. 계속된 위기 속에 신자유주의의 정당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저들은 공권력 강화를 통한 처벌, 각종 개발사업 지원정치만을 반복할 것이다. 우리가 겪는 삶의 위기를 ‘정치의 전면’에 올려야 한다. 이 위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체제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동일한 위기의 다른 양상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체제전환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대안사회의 모습을 대중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필요한 ‘정치’의 모습이다. 비록 미약할지라도 사회운동이 ‘체제전환운동’으로 정치세력으로 ‘등장’해야 한다. 이 ‘등장’으로부터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이 열리고, 새로운 ‘정치적 주체’들이 모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4. ‘체제전환운동 정치세력화’ 이렇게 시작해보자

##### 1) 2024 체제전환 정치상상 99% 위원회’(가칭)

체제전환을 향한 정치적 전망과 대안을 만들고, 정치적 주체로 스스로를 조직한다는 것은 이를 수행할 조직적 실체가 있을 때 가능하다. 2024년 총선까지 ‘2024 체제전환 정치상상 99% 위원회’를 통해 이 과제를 수행하자. 99%의 목소리를 모아 체제전환의 전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현재의 정치가 삭제하는 99% 대중들의 삶의 문제를 정치의 전면에서 세워내자. 세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돌아간다고 여기는 대중들과 함께, 총선이라는 제도정치의 틀을 넘어서는 체제전환 정치를 향한 실천을 만들어가자.

9월 중 사회운동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위원 모집’을 시작한다. 함께 하는 위원들은 ‘99% 위원회’의 핵심 활동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체제전환정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회운동의 위치에서 ‘집합적 정치행동’의 공동경험을 쌓아가자.

##### 2) 주요 사업 계획(구상)

###### (1) 체제전환 정치상상 99% 토론

2023년 하반기까지(10월~12월) ‘99% 위원회’ 위원들이 초동이 되어, 전국 곳곳의 사회운동 활동가들과 크고 작은 풀뿌리 토론을 진행한다. 지배체제에 대항해온 사회운동의 위치에서 우리 사

회 문제를 진단하고, 사회운동의 요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다른 세계로 가는 길목이 될 수 있는지, 사회운동이 만드는 정치적 전망과 대안으로서 '체제전환운동'의 내용이 무엇인지, '체제전환운동'으로 정치세력화되어야 할 필요성과 이를 통해 열리게 되는 새로운 가능성이 무엇인지 등을 토론한다. 사회운동단체, 노동조합, 지역 모임 등 다양한 단위에서 풀뿌리 토론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모아 공동의 전망을 밝히는 결과물을 제출한다. '99% 토론'이 얼마나 풍부하게 대중적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99% 위원회' 활동의 폭이 결정될 것이다.

## (2) 체제전환 99% 정치대회

2024년 1월, 풀뿌리토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풀뿌리 토론 참가자들이 모여 '공동의 전망과 활동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정치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2024년 총선 시기 구체적인 공동행동 방안을 도출하고 공동의 결의를 모아낸다. 이때 공동행동 방안은 후보출마 등 제도개입전술을 포괄할 수 있다.

## (3) 체제전환 정치광장(대중적 정치행동)

2024년 3월 28일부터 총선 공식선거가 시작된다. '99% 위원회'는 정치대회의 결의를 바탕으로 총선 시기 대중적 정치행동을 펼친다. 체제전환의 방향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체제전환 정치의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행동이 되어야 하며, 모든 사업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중사업으로 기획된다. 예를 들어, 광화문 광장에서 각종 사회운동 부스, 소규모집회, 포럼과 같은 다양한 기획들이 배치되고, '99% 위원회' 활동을 결산하는 대규모 대중집회 또는 행진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 평등세력으로 ‘등장’ 하겠다

시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1.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지난 22년 5월 단식투쟁을 마무리하며 ‘정치의 실패’를 선언했다. 이는 보수양당구도의 문제와 더불어 민주당의 한계를 절감한 것에 다름아니었다. 이후 차제연은 현재 한국 사회에 터져나오는 삶의 위기가 구조적 문제임을 지목하면서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인 요구로서 모아내고 더 폭넓은 세력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활동방향을 설정하였다. 비단 지금의 정치 국면이 차별금지법의 입법이 요원한 시기라는 판단도 있었지만 더불어 지금 우리 삶에 맞닥뜨린 문제들이 차별금지법으로 모두 수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기도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는 제정이 가능한 사회적 조건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판단, 차별금지법 제정하기 위해 사회 변화까지 추동해야 하는 현실에 자조하면서도 지금은 차별금지법을 입법 과제로 좁힐 것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과제로 확장할 때, 차별금지법 제정하자가 아니라 평등으로 나아가자라는 요구로 전환할 때임은 분명했다.

### 2.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입법 운동이면서 반차별 운동이었다. 차별금지법을 사회적 의제로 올리기까지 차제연의 운동은 국회가 아니라 대중을 향했었다. 이들의 이어말하기, 평등행진, 평등버스, 차별금지법있는나라만들기 유세단 등 이 사회에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현장의 목소리로 연결하고 알려나가고자 했다. 지역에서 성소수자가 자신을 드러내며 목소리 낼 자리를 내고 너무 익숙해서 차별인 줄도 몰랐던 경험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각국의 언어로 평등을 함께 외치며 차별은 지금 바로 닥친 내 삶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왔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차별금지법은 모두를 위한 법으로, 차제연은 한국 사회에 차별과 혐오의 문제, 평등의 과제를 제기하고 연결하는 단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차제연이 새삼스레 다시 이야기하는 평등세상은 무엇인가. 어린이, 청소년 누구나 성평등 도서를 공공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세상, 공공이 지역주민들의 마을극장을 함께 지키는 세상, 성소수자가 광장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세상, 누구든지 불별터위에 쪽방에서 살지 않을 수 있는 세상,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내 집에 살며 이동하는 세상. 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모인 차제연 소속단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이미 노력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이다. 그 활동들의 총합이 앞당길 세상이 바로 평등세상이 될 것이라는 공동의 전망을 세우는 일이 차제연이 이후의 활동에 담고자 하는 바이다. 각 지역/영역의 고군분투가 각개전투가 아니라 하나의 목표로 모이는 힘이 될 것이란 감각, 내 삶의 위기를 함께 넘어설 힘이 연결될 수 있다는 감각이야말로 지금의 답답함과 무기력을 넘어설 동력이라 믿는다.

이러한 믿음 혹은 다시 평등으로 나아가자는 활동 방향을 수립할 수 있던 것은 차제연이 이전의 활동을 통해 얻은 자신감인지도 모른다. 최소한 우리 스스로에게 기대를 걸었을 때 실망한 일은 없었다. 실망이 뭐가, 각자 다른 이들이 서로를 알아차리고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갔던 길과 길 위에는 언제나 그만큼 또다른 가능성이 자라났다. 미약하나마 세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3.

차제연이 활동 방향을 수립하고도 그에 따른 계획을 정하는 데 있어 난항을 겪던 중 체제전환의 전망을 가지고 공동의 활동을 모색해보자는 제안은 반가우면서도 무거운 것이었다. 차제연의 운동을 체제전환으로 정의하며 활동해오지 않았고 각 단위마다 다른 의견과 정의 속에 체제전환은 낯설고 어려운 용어일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체제전환 운동과 차제연의 관계를 규명하기 보다 어떤 방향에서 다른 사회를 향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고, 차별금지법제정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같은 질문을 통해 방향을 가늠하고 ‘평등사회로의 전환’을 명명하며 공동투쟁의 전망 또한 그려낼 수 있었다. 이러한 결정은 차제연의 향후 활동 방향의 연장선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공동투쟁 또한 다른 사회로의 전망에 평등이 빠질 수 없다는 것, 총선을 앞둔 시기에 차제연 단독이 아닌 대안사회를 가늠하는 단위들과 함께 돌파하는 것이 더욱 힘을 그러모을 수 있다는 전략적 연대에 가깝다. 그럼에도 이는 큰 결정이고 지금의 답답한 상황을 우리 힘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럴 때 발제자의 제안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자본주의를 겨냥한 체제전환은 문제 의식에 동의 여부를 떠나 차제연의 과제와 연결 짓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총선까지 대략 8개월여 남은 시간을 생각할 때 다른 방식의, 더 긴 호흡이 필요한 논의가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든다. 각 운동의 요구와 전망들을 체제전환이라는 말로 미리 묶어내기보다 어떻게 교차하고 연결되는지를 먼저 잘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어떨까.

### 4.

99% 대중들의 삶의 문제에서부터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우리 각자가 분투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길은 시작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차제연은 평등이 이 사회 변화의 근본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민들이 평등을 자기 삶에 와닿는 문제로 연결시키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99%위원회나 풀뿌리토론 등 시민들과 사회운동이 구체적인 전망과 전환의 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무척 중요할 것 같다. 다만, 논의 속에서 만들어낸 공동의 전망 이후엔 무엇이 있는 것일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는, 효능감 있는 운동을 만들어 갈 채비도 필요할 듯하다. ‘평등사회로의 전환’ ‘돌봄사회로의 전환’ 과 같이 몇 가지 구체적인 전환의 상을 제안하고 그 안에서 각각의 목소리들을 모아내는 방향은 어떨지도 생각해본다. 각자의 위치에서 출발해 99%의 길을 내는 주체로서 스스로를 명명할 때 이 사회를 바꾸는 ‘전환’의 세력으로 함께 ‘등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때 차제연은 평등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평등세력으로서 등장하겠다.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

김필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장

## 0. 들어가며

지난 토요일 지역장차원에서 일본 핵오염수 방류 반대집회에 참석한 활동가들의 사진이 단독방에 올라왔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함께 나온 가족단위 활동가도 있었습니다. 주말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일을, 그 옆 나라인 한국에서, 서울에서, 그리고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뭐라도 하자고 동을 튼 이도 없었고, 저도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오래 운동한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랜 활동가가 오염수 방류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방류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게 될 꺼 같다는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 1. 전장연에게 ‘정치’는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작동해왔는가?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성장과 장애대중의 정치력 강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정세 변화를 고려하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0년 기조 및 투쟁방향으로 ‘아래로부터 정치참여 조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범 이후 ‘강령’에 근거하여 취해왔던 정치참여 방식은 주로 ‘투쟁의 물리력을 통한 제도정치 활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별 단체의 정치력에 따라, 또는 정책요구의 내용과 수위에 따라 국회 로비, 정당 참여 조직, 후보 전술 등 다양하고 폭넓은 정치참여는 사실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양하고 폭넓은 정치참여의 수준에 비해 ‘아래로부터 정치참여 조직’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논의’를 전장연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정치참여 활동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논의가 2020년 총선 이후 “정치참여 기준(안) 제작을 위한 TF”를 구성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진보적 장애인운동을 만들어 온 활동가 12인으로 구성된 TF에서 2차례의 설문조사와 3회에 걸친 TF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 참여 기준”이 마침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참여 기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해설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정치참여는 제도 권력을 무너뜨리고 비장애중심주의를 철폐해나가는 저항의 수단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이라

는 확고한 원칙을 지속해서 견지할 것이며, 장애인의 차별철폐와 인간다운 삶의 쟁취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참여 기준

### 1) 전장연 활동가가 장애인후보 출마

(1)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중 직접 선출된 대표는 현직의 지위를 가지고 출마할 수 없다. 출마할 경우 출마 발표 즉시 대표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2) 전장연 회원단체 중 전국조직 할당의 상임공동대표가 출마하는 경우에 해당조직의 논의와 결정사항 이기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해당 조직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3) 개별 단체회원 대표와 중앙운영위원, 활동가, 개인 회원(장비회원)가 후보로 출마할 경우에는 각 단위와 개별활동가의 의견이기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존중한다.

### 2) 전장연이 선거참여 할 후보 발굴

(1) 후보발굴은 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 공식논의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장애인후보를 발굴할 수 있다.

(2) 후보발굴을 위해 조직적 지원도 중앙운영위원회 공식의결기구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조직적 지원의 범위는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전장연이 출마한 장애인, 비장애인후보 지지선언

(1) 출마한 장애인후보와 비장애인후보에 대하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참여하는 선거공동참여기구 (예, 2020장애인차별철폐총선연대)에서 제출한 정책요구에 대하여 문서로 협약할 경우 정당과 관계없이 선거공동참여기구에서 적절성 여부 논의를 거쳐 선거공동참여기구의 이름으로 지지할 수 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지역장차연 단독의 이름으로 중앙운영위원회의 논의와 합의된 결정없이 장애인후보와 비장애인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은 할 수 없다.

### 4) 전장연 활동가의 직접적인 후보 유세 활동

(1) 출마한 장애인후보와 비장애인후보에 대하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참여하는 선거공동참여기구 (예, 2020장애인차별철폐총선연대)에서 제출한 정책요구에 대하여 문서로 협약할 경우 정당과 관계없이 선거공동참여기구에서 적절성 여부 논의를 거쳐 선거공동참여기구의 이름으로 지지할 수 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지역장차연 단독의 이름으로 중앙운영위원회의 논의와 합의된 결정없이 장애인후보와 비장애인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은 할 수 없다.

### 5) 전장연의 정당지지 선언 활동

(1) 전장연과 지역장차연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논의와 합의된 결정 없이 정당지지 선언을 할 수 없다.

(2) 선거공동참여기구가 제출한 정책을 정당의 공식기구를 통해 수용할 경우 선거공동참여기구의 논의를 거쳐 선거공동참여기구의 이름으로 지지선언 할 수 있다.

※ 정당의 공식기구란 선거의 형태(지방선거, 보궐선거, 총선, 대선)에 따라 확인

### 6) 전장연과 정당 간 정책협약

(1) 전장연과 지역장차연 이름으로 각 정당과 정책협약을 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논의와 합의된 결정을 바탕으로 정책협약을 할 수 있다.

(2) 선거공동참여기구의 이름으로 정책협약을 진행하는 것은 선거공동참여기구의 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 2. 전장연, 체제전환을 향한 정치적 전망과 대안

비장애인 중심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은 예외적인 존재 또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22년 동안 장애인권리를 외쳤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로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사회운동을 지속해왔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비장애인 중심 사회를 멈춰 세웠습니다.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듯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을 실어나는 지하철을 멈춰 세운 전장연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불법폭력단체가 되었습니다.

특히,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운동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생산’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내가 하는 일을 노동을 인정해달라’, ‘권리를 생산하는 일을 노동으로 인정해달라’를 요구하는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틀에 갇혀 직업훈련을 열심히 받아 생산능력을 향상시켜 민간노동시장에서 노동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대부분 실업자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왔습니다. 중증장애인 실업률 7.7%라는 낮은 수치는 중증장애인을 노동할 수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보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장연의 표적수사, 갈라치기 혐오정치로 권리중심 일자리가 곤혹을 치르고 있지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세상을 바꾸는 캠페인이고, 자본주의 체제를 흔드는 체제전환 운동입니다.

## 3. 탈시설장애인당,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등장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 기간동안 전장연은 탈시설장애인당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당 활동을 함) 탈시설장애인당은 선거기간 동안 장애인권리를 확장하는 전술로, 장애인권리 정책제안·선전홍보과 직접행동을 전술로 사용하였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黨)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무리들의 당(黨)이 아니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당(黨)연한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당(黨)으로, 정치 이상의 실현을 위해 정치 권력의 참여를 목적하는 합법정당(黨)과 달리 ‘정치를 당당하게 대하다’의 비합법 정당(黨), 가짜정당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탈시설장애인당’ 명칭을 계속 사용하면 정당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벌금을 위협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는데 탈시설장애인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거론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으로 특정 후보의 이름이 거명된 피켓이나 현수막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당법에 의하면 진짜 정당을 만들려면 5,000명이 필요한데 탈시설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탈시설장애인 자체가

5,000명도 안 되는 점을 꼬집고, 탈시설장애인당이 제시하는 모든 의제들이 새로운 정책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들이 예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선거기간 동안 장애인의 의제와 정책을 장애인당사자 자신의 이야기로 스스로 알려내고 활동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였고, ‘문제라고 정의된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혁명은 시작된다’는 명제를 실천하는 직접행동입니다.

## 4. 나가며

발제자가 제안하는 체제전환운동 정치세력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제안에 동의합니다. ‘정치협오와 냉소의 선거’가 되지 않기 위해 사회운동에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모두가 ‘이 정부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에 동의할 것입니다. 체제전환운동은 단지 현 정부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을 넘어 이 세계, 이 체제가 잘못 되었다는 점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한 정치사회공동체의 모습 제안으로 이해합니다.

체제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볼 때 그 조직의 양식 또는 어느 주권자, 단체, 세력 등이 일정한 정치 원리에 입각하여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신분 체제 등으로 쓰여집니다. 그렇다면 체제전환운동은 자본주의 체제의 전환, 전복 등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가지는 무게감은 대중에게도 사회운동에도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운동 안에서의 체제 전환은 덜 무거운데 정치참여 안에서 체제 전환은 매우 어려운 단어로 느껴집니다. 기후위기는 지금 당장이라 외치지만 다음세대에 나타날 조금은 미래의 일이라 (마음 속) 생각과 자본주의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체제이고 그것을 전환할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 라는 질문의 무게감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선거의 40%는 무당층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총선은 이 비율이 더 높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당층이라고 하지만 이 대중은 내 마음, 내 불안을 읽는 정치를 기다릴 것이고, 함께 목소리를 낼 창구가 찾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채워주는 것이 사회운동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당장 무엇이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살 수 없다, 핵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독립운동 역사 지우기 반대한다 등 손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싶습니다. 사회운동 내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그 시작이 923기후정의행진이 되어도 좋겠고 더 빨라도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게 될테니.

# 체제전환운동과 주거권

지수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0. 체제전환의 필요

그간 한국 사회는 주택소유와 개발 중심의 주거 정책을 펼치며 집을 투기와 자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에 더불어, 한국의 가부장적 자본주의는 주택 상품화, 주거불평등을 강화하면서 자본과 정상성 사이에 서 있는 이들을 끊임없이 배제하고 탈락시켰다. 부동산 투기를 긍정한 채 모든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다며 대출을 마구잡이로 확대하고 민간 주도의 개발과 이를 통한 이윤 창출을 독려하는 사회에서, 세입자를 함부로 내쫓고 이들의 보증금을 쉽게 떼먹는 사회에서, 집을 매개로 정상가족의 형성을 강제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늘 쫓겨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언제까지 집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정상성을 획득하지 않아서 주거권을 박탈당한 채 시장 질서에 내몰린 채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내 삶의 안정을 꾀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를 감내해야 하는가. 민달팽이유니온은 집을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킨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집 없는 이의 삶을 착취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인식을 시작으로 우리의 집을 둘러싼 구조적 불평등을 함께 들여다보며, 이것은 결코 단일한 운동 하나로 이야기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임을 절실히 느낀다.

## 1. 언어의 획득과 연대의 가능성

### 1) 기후정의

집이 상품화된 사회에서는 기후재난으로부터 취약한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민간 주도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더 큰 불평등을 초래한다. 반지하 집이 물에 잠기고, 불법 원룸이 폭염으로 찜통이 되고, 쪽방이 흑한에 얼어붙고,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탈출할 수 없는 이 일련의 사태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더 나은 그리고 더 비싼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개발 논리로 이어진다. 실제 반지하 폭우 참사 당시 오세훈 시장은 반지하 주택이 많은 지역에 재개발 가산점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에서 2023년에 번역한 <탈성장과 전략 : 어떻게 사회생태적 변혁을 일으킬 것인가?>(나단 발로우 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한다.

“많은 수의 신축 주택이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추상적인 금융 상품 역할을 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중략) 생태적 개보수는 임대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며, ‘생태적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생태학이라는 이름으로 퇴거가 발생한다. 생태적 주장은 종종 한편으로는 생태적 조

치를 할 수 있고 원하는 사람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환경 기준을 감당할 수 없거나 생존적 위협에 맞닥뜨리는 사람들 사이의 불균형을 드러낸다. (중략) 주택이 사회 정의에 대한 고려와 상관 없이 상품 및 투기 자산으로 남아 있는 한 주택을 ‘녹색화’하는 것만으로는 주거 정의와 기후 정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집’이라는 자산증식수단을 가족 및 개인 단위에서 계속 생산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개발하고 투기를 일삼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없다.

애당초 그 땅과 집은 누가 누구에게 소유권을 부여했던가? 그런 것이 왜 가능했나? 우리는 지구를 빌려쓰고 있는 것이라 이야기 하는 맥락과 투기적 주택 소유와 개발 및 시세차익을 통한 자산 증식에 얽매는 구조에서 벗어나 누구나 점유 형태와 무관하게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궤를 함께 한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용산정비장은 50만제곱미터에 달하는 공공부지인데, 이 공간이 주거를 비롯해 도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소로 계획되기는 커녕, 오세훈 시장은 그레이트 한강을 운운하면서 함께 그 땅을 민간에게 매각하여 대규모 국제업무지구 단지를 만들고 그 주변 또한 대대적인 개발 사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2022년 8월 당시)을 5조7천억 삼각하는 한편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동자동 쪽방촌을 둘러싼 공공주택사업은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집, 소득이 적어도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절히 사용하며 생태적으로 모두에게 안전할 수 있는 집은 민간 영역에서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형성될 수 없다. 그간 한국 사회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인구를 재생산시키는 동력으로 사용했던 주거 정책의 원칙을 전면 바꿔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언어를 획득하는 것, 함께 할 사람들과 연대를 맺어가는 것은 주거권이 기후정의와 함께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공의 개입을 이야기 하며 만들어갈 수 있다. 다만 이것이 단순히 다들 주거로 모여라, 다들 기후로 모여라, 정도의 수준에 그치면 안된다는 고민은 있다.

## 2) 페미니즘

최시현(2021, 「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나」)에 따르면, 자가소유란 “젠더 불평등한 자본주의 시장사회에서 여성들이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몇 안 되는 수단”이었다. 가장의 안사람 노릇을 하길 기대받던 여성은 집안을 청소하고, 식구들의 밥을 짓고,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고, 웃어른들의 건강을 돌보는 등 바깥사람을 내조함과 동시에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일 전반을 도맡아 했다. 심지어 바깥사람이 벌어들인 작은 월급을 부풀릴 궁리를 하는 것, 되도록 더 많이 가족 소유의 자산을 부풀리는 것, 그리하여 가족구성원들의 삶을 풍요롭게 펼치는 데에 기여하는 것까지가 역할로써 요구되었다. 이들은 복부인이라 불리며 부동산 투기 세력의 대표주자로 비난을 떠안기도 했다가, 여하튼 자식에게 집 한 채 물려줄 수 있고 노후를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써 스스로가 가족의 행복에 기여한 바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반대로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에 실패한 여성은 자녀가 결혼할 때 물려줄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책하거나 주변으로부터 비난받는 순간을 마주했다.

여성이 부동산을 통해 가족의 평화를 획득해왔던 일련의 과정은 2023년 현재, 좀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날지언정 큰 틀에서는 여전하다. 2023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약9억9천만

원(KB부동산)이다. 바깥사람 1명이 월급으로 돈을 벌어오고 안사람이 그 돈을 부풀리는 가내수공업으로는 자가소유의 꿈을 이룩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에 도달한 지 오래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그 자체로 여성 인권 신장임과 동시에, 집안과 집밖 모든 영역에서 복역할 인력 총원의 기능도 한다. 한편, 젠더불평등이 심각한 한국에서 자기가 자기다울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독립에 대한 논의가 온라인 상에서 활발히 벌어졌다. 집이란 응당 둘이 결혼해서 빚지고 구매한 뒤 수십 년에 걸쳐 대출을 갚아가다가 추후 개발이익 및 시세차익을 통해 생계에 보탬이 되고 노후도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주어진 언어의 전부라면, 어쩌면 몹시 당연한 사고 흐름이다. 정상가족을 꾸린 이들이나 가능할 것을 나 혼자 또는 어떤 제도적 지원 없이 일궈야 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감각하게 되기 쉽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혼자 재테크를 공부해서 알아서 탈출하는 것만이 독립된 개인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기는 구조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들의 삶을 낙오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려고 페미니즘을 함께 이야기 하는 것이기도 하다.

누구에게나 집다운 집을 보장하기 위한 길 위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아야 하는가. 여성학자 김현미는 꾸준히 신자유주의 경제하의 생활정치와 여성운동에 대해 이야기 해왔는데, 2021년 출간한 저서 「페미니스트 라이프스타일」에서 “페미니스트로서 살아가기 위한 지속가능한 세계관과 삶의 선택지”를 이야기 했다.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페미니즘은 공동체적 형식을 지향”하기에, 그것을 구축하기 위한 정치와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고민도 이에 닿아있다. 우리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집이 필요한가?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회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공동체적 형식이 필요한가? 당장 눈 앞에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고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우리에게 잃어버린 권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함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이에게, 정상가족을 꾸리지 않은 이에게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를 함께 이야기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 없이는 우리가 함께 말하고 싶은,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집을 보장하기 위한 길을 더욱 요원해진다. 정상가족을 구성하지 않아도, 충분한 소득이나 자산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집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를 함께 상상하는 연대가 필요하다. 우리가 연대를 쌓아가는 과정에 함께 서 있다면 대출, 분양, 청약 제도의 불공정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가 놓인 이 땅의 질서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함께 이야기 하는 것이 무엇 하나 거리낌 없이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 3) 차별금지과 평등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2021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만인선언 ‘평등하다’를 함께 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우리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외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위 선언문에서 구체적으로 홈리스, 쪽방 주민, 고시원 거주자를 비롯해 세입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주택 소유와 투기를 둘러싼 사회적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와 이익창

출 구조에 대한 언어를 위 선언문에서 바로 직관적인 연결을 짓긴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닥 무리일 것도 없다. 선언문에 담긴 이 많은 차별의 이유들은 모두 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차별과도 닿아 있다. 사람들은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장애와 나이와 출신국가를 이유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한다. 민달팽이유니온은 2021년 성소수자 주거권 실태조사 및 2022년 성소수자 주거지원 매뉴얼 작성을 통해, 2022년 비혼청년여성 주거X노동 인터뷰를 통해 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함께 이야기 하고자 했다. 2021년 청년주거X기후위기X젠더 세미나, 2022년 집과젠더포럼 등도 같은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작고 소중하게 시작한 공론장의 자리였다.

최근 전세사기 대응 과정에서,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할 뻔한 상황에 놓였던 이가 이례적으로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과정이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주거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다. 탈가정 청소년은 만19세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친족 부모 동의 없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그렇다고 공공임대 입주 자격도 없다. 쉼터만이 제공되는데, 그 공간에서는 대체로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칙들이 즐비하다. 2019년 설립되어 2023년 정식으로 출범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시설화된 공간에서 청소년이 겪는 문제가 인권 침해와 함께 주거권 박탈에 따른 문제도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장애인 탈시설 운동을 함께 이야기 하며 시설사회로부터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한국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안전한 거처 마련에 관해 공공임대 입주시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도 한다. 다만 여기에는 성매매 피해 여성 내지 성노동자에 대한 접근이 비어 있다. 탈가정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성매매와 빈곤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이들의 주거권을 외면한 채다. 이는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것에 비해 이들을 위한 복지 및 주거 정책이 부족한 문제와도 연결된다.

또 이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의 함의와도 닿아있는데, 가임기의 여성에게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조진부 포상처럼 주어지는 공공임대가 곧 행복주택의 시작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 들어선 행복주택은 문재인 정부 때 대거 공급되었는데, 이것은 청년을 앞세워 정상가족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눈물겨운 인구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 때 청년이란, 지난 8월에 열렸던 청년 정책 공론장에 참여한 발제자 정준영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UN 2018 권고등판무관 사무소가 2018년 발행한 “청년과 인권”(Youth and human rights) 보고서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다(OHCHR 2018년 보고서). 결론으로 곧장 나아가자면 보고서는 청년을 “고정된 연령집단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비동질적인 범주”로서 “성별, 민족, 인종과 같은 다른 형태의 정체성과는 다르게, 삶의 지나가는 한 단계”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 단계는 다름 아니라 ‘의존 상태’에서 ‘독립 및 완전한 자율성의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중략) ‘청년 문제’란 한 사람의 시민이 의존 상태에서 독립 상태로 이행하는 삶의 단계에서 겪게 되는 문제이다. (중략) ‘청년정책’의 정의 : 청년이라는 삶의 단계에 있는 한 시민이 의존 상태에서 독립·자율성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을 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② 방해가 되는 제약을 해결하고 ③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 (중략) 청년정책을 이렇게 정의하면, 지금까지 분명한 기준 없이 청년정책으로 분류되던 많은 사업 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젊은 미혼 남성의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더 이상은 청년정책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

기존 주거 정책이 배제하고 있는 삶에 대한 진단과 함께, 체제전환을 함께 이야기 하는 주거권

운동이란 차별받는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운동으로 뻗어가야 할 것이라는 고민을 한다. 민달팽이유니온이 그간 해왔던 청년 당사자 중심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 또한 이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고, 이후의 활동을 계획해나가야 할 것이며, 이것은 결코 개별 단위나 영역에서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도 하다.

## 2. 체제전환운동의 세력화를 준비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것

### 1) 서로의 언어로 운동을 해석하고 계획하는 것

민달팽이유니온이 국가와 대학교 등을 상대로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할 책무를 요구했을 때 마주해야 했던 멸시와 혐오의 언어들은 서로의 영역에서도 벌어진다. 특정 사회로 진입할 자격을 박탈하며 '입장거부'로 일관한다. 자격이 박탈된 이들은 그 밖으로 쫓겨나고, 시설화된 공간으로 내몰린다. 이 사회에 몸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은 누가 누구에게 부여할 수 있던가? 적어도 집에 관해서만큼은 그 자격의 여부가 집문서, 땅문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감각을 많은 세입자들이 느낀다. 국제사회에서 주거권이란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는 것, 살만한 집에 사는 것, 이때 부담가능한 주거비로 살아가는 것이라 이야기 한다. 한국 사회가 그간 주거 정책을 펼쳐왔던 방식대로는 결코 답을 수 없는 말들이기도 하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최근 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 사업의 종료를 준비하고 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이 정책을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만 해석하지 않으려 한다. 청년월세지원은 단순히 월세살이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넘어서, 주거 정책의 원칙과 사회적 연대에 대해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정책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진다고 해석해야 한다. 기존 주거 정책,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는 포용되지 않았던 청년 빈곤층의 주거비 보조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면서 만들어진 정책이기에 그렇다.

현 주거급여 제도 하에서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원가족이 수급가구가 아니라면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중위소득의 단 47%에게만 주어지는 주거급여조차도 그림의 떡이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주거빈곤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 : 연령이 어리니? 결혼 안했니? 친족이 수급가구도 아니니? 그렇다면 가족으로부터 지원 받아 주거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니 가족들이랑 알아서 하렴.

새로운 가족 형태를 꾸렸거나, 온전히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하여도 청년은 그 자신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법률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친족이 수급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청년에게 닦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줄 제도가 없으니, 오롯한 개인으로 청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주거비를 내기 위해 돈을 더 벌어야 하는가? 혹은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만30세가 넘길 기다려야 하는가? 혹은 법률혼을 해야 하는가? 이중 그 무엇 하나 괴상하지 않은 것이 없다.

청년월세지원은 기존 주거 정책,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배제하고 있는 문제, 다양한 형태의 주거빈곤을 겪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문제를 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와도 연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청년 빈곤층을 비롯해, 또 어떤 이들이 주거빈곤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함께 풀어가고 사회적 논의를 함께 쌓아가기 위한 계기로도 삼을 수 있어야 한

다. 청년을 키워드로 만들어진 정책이지만 이 정책이 필요했던 문제인식의 시작은 불평등에 있다는 것, 기존 질서를 고수하면서 잔여적인 방식으로 때때로 이벤트나 장식품같은 취급을 받아가며 가끔 쥐어지는 것들을 수용하며 그래도 무언가를 해냈다 라고 위안삼지 않는 것도 필요한 태도였다.

2) 정치인이 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거버넌스 주체로 인정받고 등용되거나.. 하는 것 말고

민달팽이유니온은 2011년, 집을 항상 지고 다니는 달팽이와 달리, 집이 없는 동물 '민달팽이'가 집없는 청년들의 모습과 닮았다며 '민달팽이'라는 이름을 달고 청년 당사자의 주거문제를 이야기 하는 단체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집 문제를 고민하는 대학생 모임으로 취급되기도 했고, 그것이 주는 장단이 있긴 했으니, 요긴하게 사용했다. 2010년대 초반, 민달팽이유니온은 서울 중심으로 여러 대학교 학생회와 함께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를 출범하여 대학생 주거권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민달팽이 지수를 만들며 이슈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실제 몇몇 대학교 내 기숙사 공급과 주거장학금 도입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는 보다 안정적으로 도시에 사는 청년층이 겪는 주거 문제를 이슈화하고 이에 관한 제도적 개입을 다양하게 시도했다. 원룸관리비 가이드 라인을 서울시 하에서 연구용역으로 진행하며 원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어떤 고지의무도 없이 관리비를 받아가는, 사실상 두 번째 월세로 작용하는 청년 세입자들의 주거 이슈에 대한 법제도적 개입을 꾀하였다. 특히 서울시장(박원순)과 대통령(문재인) 모두가 사회시민단체에 우호적인 환경이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2013년부터 청년 대상의 세입자 교육 및 주거상담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지역/광역 범위의 세입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함과 동시에, 청년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비영리주거모델을 실천 및 공급하고, 주거급여 청년분리지급 및 청년월세지원 도입 등 빈곤층 청년을 배제하는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왔다. 또한, 국내 최초로 지자체 내 청년주거상담센터 설립 및 집 구하기 동행 서비스를 도입시켰고, 청년 주거 정책 기본계획 내 불법건축물 감독관 제도를 도입시켰고, 임대인의 미납 세금 조회·확인에 권한에 관한 법 개정 등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요구 및 실천했다. 제도개선 외에, 전국을 활동지역으로 청년 세입자 전월세 집구하기 AtoZ 교육, 청년 세입자 주거 상담 및 현장 대응, 청년 주거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주거권 담론 확장 및 연대 구축 등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달팽이유니온은 정권 교체 과정에서 모든 거버넌스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경험을 했다. 정권이 바뀔에 따라 이토록 쉽게 사라질 자원과 역량이라면, 무언가 잘못됐다는 문제인식을 느꼈다. 그것은 도리어 갈등을 부추겼고, 마치 공공에서의 역할을 뺏기면 우리의 운동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곧 조직의 미션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기존 체제를 일부 포용하면서 우리의 운동을 체제 안에서 펼치겠다던 포부가 어느 순간 주객전도되는 순간도 느꼈다. 그러나 행정은 행정의 역할을, 정당은 정당의 역할을,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고민을 했다.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었다. 특정 정당의 집권, 그리고 행정의 우호적인 태도에 의존하여 만들어진 관계는 생각보다 일방적이었고, 공동의 자원이라고 여겼던 것들 또한 쉽게 사라지는 방식으로 우리의 운동이 소진되어선 안될 것인데, 에 대한 고민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졌다.

발제문에서는 다른 세계를 향한 공동의 전망과 서사 구축에 대한 제안을 함께 이야기 하고 있

다. 2024년 총선이 끝난 뒤, 거대양당의 서로의 득표율과 의석 수를 가지고 누가 이겼다 졌다를 말하는 것 외에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함께 하면 좋겠다. 체제전환운동의 세력화를 말하는 길내는 모임에서는 2024년 총선을 대응하며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등장을 함께 상상하고 이에 함께 할 이들을 조직하자 제안하고 있다. 언제까지고 정당에게, 언론에게, 행정에게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 그러기 위해선 이 운동의 토대가 튼튼해야 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공동의 전망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한국 사회는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너무나 강력한 폭력과 억압들이 벌어지고 있다. 기존 체제를 조금씩 바꿔가며, 그 안에 들어가 하나 둘 개선하며 무언가를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헛헛하게 느껴지는 때다. 오히려 체제전환이야말로 우리를 더 가슴 뛰게 하고 우리가 당장 해나가야 할 연대의 방향을 분명하게 만든다. 우리가 획득할 것들이 우리 편의 국회의원 한 명 더 만들기 내지 우리 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만들기 등으로만 귀결되지 않을 수 있는, 이 땅 위에서 우리 자체가 주요한 정치세력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연대를 함께 이야기 하며 일단, 같이 등장해야겠다.

## 체제전환운동 세력화와 총선 대응 방안 토론

이승철 |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

---

# 체제전환의 ‘가치’가 체제전환 ‘운동’으로 나아가려면

남영란 | 부산지역 활동가

## 1. ‘체제전환’은 얼마나 사회화 되었는가?

2022년 924기후정의행진이 내걸었던 ‘체제전환’이 사회운동에 주었던 반향은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 의제와 영역 등으로 각각이 흩어져 있던 운동들이 ‘체제전환’이라는 하나의 가치로 모아질 수 있었던 드문 경험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난 1년의 시간은 ‘체제전환’이라는 운동성과 방향성을 사회운동으로 확장하는 과정이었는가?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지역에서 ‘체제전환’에 대한 동의를 표하면서도 그것이 공허하고, 알맹이가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체제전환이라는 ‘가치’가 동의를 얻는 것에서 체제전환 ‘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다양한 영역의 사회운동이 ‘체제전환’이라는 방향으로 운동을 연결하려는 매우 의식적이고 정치적인 초동주체들이 필요하다. 이 초동주체들이 서로를 확인하고, 운동을 연결하고, 유의미한 실체로 등장할 때 비로소 ‘체제전환’이 사회화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점에서 체제전환운동의 세력화와 체제전환의 알맹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

## 2. 체제전환운동의 세력화는 누구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가?

최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평등과 존엄을 사회전환의 방향으로 제기하는 운동의 전망 만들기’ 전국 순회간담회 기획은 차제연이 체제전환운동의 세력화에 화답하는 구체적 사례라고 생각된다. 그 외에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기 때문인지 사실 잘 파악하기가 어렵다. 각 의제와 영역, 개인과 단체가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체제전환운동으로 합류하고 있는지, 혹은 그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해갈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체제전환운동 정치세력화의 시작으로 제안하고 있는 <체제전환 정치상상 99% 위원회>(이하 99%위원회)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를 무엇으로 연결시켜가려고 하는지, 체제전환을 향해 자신의 내용을 어떻게 재구성하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 체제전환운동에 대한 공감에서 서울지역과 비서울지역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99% 위원회>는 이 차이가 극복될 수 있는 장으로 작동하기를 바란다.

## 3. 2024년 총선은 체제전환운동의 유의미한 계기인가?

발제문을 받자마자 든 생각은 “2024년 총선,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는가?”

였다. 한국 정치 역사상 가장 관심받지 못하는 '정치혐오와 냉소'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직까지 사회운동이 정치적 전망과 대안으로 등장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면 발제문의 제목을 통해 든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한다. 정당들에게 총선은 새로운 정치적 대안이자 선택이 되기 위해 매우 유의미한 계기이고, 계기여야 한다. 그러나 이제 체제전환운동의 세력화를 말하는 우리에게 2024 총선은 유의미한 계기로 작동할 수 있는가? 혹은 유의미한 계기가 되기 위해서 정치행동을 총선에 맞추어야 하는가? 개인적으로는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은 체제전환운동의 세력화를 위한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제한하고, 지연시킬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체제전환운동의 세력화의 길에 2024년 총선이 놓여 있고, 그냥 지나가기 아까운 정도의 이벤트로 위상을 낮췄으면 한다.

#### **4. <체제전환 정치상상 99%위원회>가 체제전환운동 세력화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 테이블로 보면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크고 작은 <99%위원회>의 풀뿌리 토론이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2024년 1월에 '공동의 전망과 활동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정치대회'를 개최하며, 2024년 4월에 후보전술을 포함한 대중적 정치행동을 펼친다. 2024년 4월이라는 정해져 있는 빠듯한 일정을 중심으로 한 타임테이블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특히 서울을 제외한 지역이 능동적으로 이 일정들로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뭔가 기점이 필요하다면 2025년 9월 글로벌기후파업을 하나의 기점으로 두고 <99%위원회> 활동을 결산하는 타임테이블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4월 총선은 그간 전국을 아우르며 진행된 체제전환을 향한 99개(?)의 토론장을 바탕으로 체제전환의 밑그림, 다른 세상을 향한 밑그림을 대중적으로 공표하는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으면 좋겠다.